특별 기고

강운태

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이 최적

시정의 모든 가치 기준을 시민의 행복에 두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기치로 내건 민선 5기가 출범하고 어느덧 새해를 맞게 되었다. 지난 6개월이 빛나는 광주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확립하는 시기였다면, 올 2011년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날개를 펴고 도약하는 첫해가 될 것이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하여, 한쪽으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쪽으로는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며,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첨단산업 과학도시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3각축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창조도시 도약하는 첫 해

특히, 올 상반기에는 첨단산업 과학도시로서 광주 공동체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토의 과학산업 지도를 바꾸어 놓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정부가 R&D(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 기초과학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진흥시켜 20~30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7년에 걸쳐 3조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등의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교육·금융 기능과 연구·산업 기능 등을 연계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벨트 해당 권역의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를 20년간 각각 212조 원과 136만 명으로 추정했으며, 국민경제 전체로도 생산유발효과가 약 235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2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광주시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유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말 정·관·학 특히 과학 분야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김진의 교수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영진의원, 그리고 광주시장인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등 지역사회의 온 역량을 결집해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기 위한 매우 좋은 외부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온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지정이 이달 안에 고시되고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우리시는 광주연구개발특구를 연구와 생산이 어우러지고 국제 간 협력을 강화하는 개방형 연구·산업화 국제 협력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의 장기적인 경제유발효과는 약 15조에 이르고, 고용창출도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광주연구개발특구 개발과 연계하여 기초과학연구의 산실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되면 '기초과학-산업기술-산업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는 이를 통해 호남권을 과학기술 중심의 세계적인 사이언스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호남권은 연구개발특구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에 풍부하고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Science to Business'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는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영리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매우 용이하다.

국토 균형개발 한 축 담당

국토 서남권의 중심도시로서 교통 및 물류기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문화수도의 격조 높은 문화 인프라도 세계 연구인력의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선정에는 국토의 균형개발, 특히 현재 수도권과 대전 중심의 기초과학 인프라의 분산 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지방정책의 근간인 5+2 광역경제권의 원천적 불균형적 요소는 차치하고라도,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영남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첨단산업이 융성하고 기초과학이 만발한 광주의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이를 통하여 풍요한 경제공동체가 건설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위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반드시 호남권에 유치되어야 하며, 이를 발판으로 지역경제가 도약의 나래를 펼치리라 확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장〉

사설

'가축 전염병' 소비 위축 2차 피해 없게 해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벼랑 끝에 몰린 축산농가들이 이번엔 소비 위축이라는 2차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연초부터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축산물 소비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구제역과 AI가 만연하면서 돼지고기와 닭고기·오리고기의 판매가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30~40%까지 감소했다. 육류를 취급하는 음식점들도 고객이 3분의 1가량이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구제역과 AI가 장기화될 경우 육류 소비 위축이 심각한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당기간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가 적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육류의 최대 성수기인 설을 눈앞에 두고 있어 가축 전염병이 계속 확산한다면 축산농가는 물론 지역경제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

따라서 당국은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함께 육류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시중에 유통되는 육류의 안전성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근거 없는 소문에 기대 다시금 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육류 구입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구제역에 걸린 소·돼지, AI에 감염된 닭 등 조류는 기본적으로 살처분을 하기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구제역이나 AI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하된 가축이라도 굽거나 끓여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상 기후에 농수축산물 수입폭증, 여기에다 악성 가축 전염병까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폭설·혹한에 실종된 '기초질서' 방치 안 된다

연말연시 폭설과 혹한이 계속되면서 시민의식이 실종되는 등 기초질서가 엉망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단속의 눈길은 느슨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강 추위 속에 눈이 내리면 시민들은 영업용 택시 잡기도 어렵지만 택시기사의 횡포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게 된다.

광주에 폭설이 내릴 때마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승객을 상대로 목적지를 정해 호객행위 또는 승차 거부를 일삼는가 하면 합승을 강요하거나 행선지 도착 전에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이 묶인 승객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내 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반은 해마다 겨울만 되면 단속이 두렵게 느껴진다. 일부 운전자들이 눈을 핑계로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기 때문이다. 상당수 운전자들이 황색 실선이 그려진 도로에 일부러 차량을 세운 뒤 단속반에 적발되면 "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주차금지 구역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되레 화를 낸다는 것이다.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경찰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차량 번호판이 눈으로 가려진 점을 노린 일부 운전자들이 무인단속카메라를 무시한 채 신호위반 또는 과속을 일삼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면 쓰레기 무단투기도 예사다. 눈 내리는 틈을 이용해 남의 집 앞이나 전봇대 등지에 분리수거조차 하지 않은 쓰레기를 버려 이웃간에 다툼도 잦다고 한다.

당국의 단속은 이러한 한계에 따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눈과 추위를 핑계로 좌시하면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요원해진다.

운전자와 시민의식이 바로 설 때까지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결코 늦춰선 안 될 것이다.

은펜칼럼

김병인

중국어 교육 강화하자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30여년 동안 연평균 10% 내외의 고속성장을 해오더니, 2010년 말에는 GDP가 37조위안(6290조)을 기록해 일본을 추월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작년 3분기 국가 외환보유고는 2조6500억달러로 세계 최대치를 기록했고, 수출 세계 1위, 철광석, 가스, 시멘트 등 주요공업생산품 생산량도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다.

국내외 많은 연구소는 중국이 2015년 이후에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되고 2020년 전후에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각국은 중국어 교육과 중국전문가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20~30년내에 미국 다음의 '슈퍼파워'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2015년까지 미국 전체 고등학생의 5%인 75만명에게 중국어를 배우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방중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년까지 10만명의 미국 학생을 중국에 유학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상원은 지난해 '미·중 문화교류법안'을 발의하고, 향후 5년간 중국어 학습 지원과 문화 교류를 위해 13억달러(약1조3000억원)을 제공토록 했다.

영국도 중국어 조기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에드 볼스 영국 초·중등교육 장관은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능력으로 대표적인 게 중국어"라고 강조한다. 현재 영국은 중등학교 7곳중 1곳 꼴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인도도 정부차원에서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어를 중학교 교과 과목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했고,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중국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국내에서도 중국어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1122억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확대됐으며 홍콩 등 제3국을 거친 수출 실적까지 포함하면 30%가 넘고 무역 흑자도 429억달러에 달했다. 당분간 대중 수출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중국의 방한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전년대비 40% 이상이 증가한 약 200만명의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관광하고 쇼핑을 즐겼다. 일부 지역의 백화점은 국경절 특수 때는 전년대비 300%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고 한다. 더욱이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중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심화 발전할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중국어의 교육과 중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다.

G2시대다. 앞으로 중국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영어보다 중국어를 쓸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우리 지역도 미래를 위해 많은 중국전문가를 양성하고 중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언어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입시 부담이 적은 초·중등학교에서 중국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해 가르치는 것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서강정보대학 교수〉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임성훈

AI·구제역 방역은 준 전시 상황처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영암과 나주 등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축산농가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호남지역에는 아직까지 구제역이 번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현재의 확산추세와 방역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방역을 지원하는 공직자 모두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자식처럼 키워온 가축들을 땅에 묻는 농가의 심정이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서 방역과 살처분 작업을 하느라 연일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초기 발생징후를 접한 후부터 야간 상황실을 설치하고 직원들과 함께 방역활동 및 사태의 추이를 점검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방역의 한계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가축 전염병'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현행 지자체는 교통과 통신 등이 발달하면서 한 지역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행정구역상의 구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처럼 한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질병의 원인과 확산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가축의 이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축산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은 총체적인 '가축 전염병'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방재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방역대책의 상당부분을 각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도 효율적인 대책마련 수립과 시행에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방역과 살처분 등의 대책에는 행정 이외에도 검역당국이나 축산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군과 경찰 등을 동원해야 하는 '준전시' 상황까지 고려돼야 한다. 현재의 방역체계는 정부와 방역당국,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이고도 긴밀한 소통이나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방역초소를 운영하면서 도로를 통제하거나 시민생활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과 경찰이 업무를 담당하고, 공무원은 방제를 전담하는 등의 업무한계도 구분하여 볼만 하다. 또 그동안 이런 사태에 조금은 무관심하거나 대처를 소홀히 했던 지자체들도 축산농가에 대한 관심과 예찰 활동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정부와 방역당국, 지자체는 현재의 사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더 이상의 확산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가축병 의심증상을 맨 먼저 발견하는 축산농가도 이제 은폐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사료 및 분뇨, 유통차량과 축사 소독 등을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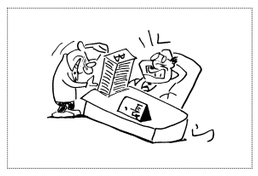
시민들도 당국이 시행하는 대책에 내일처럼 적극 호응하고 관심을 기울여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한다.

국가와 지자체, 축산농가와 유관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외양간을 고쳐서 더 이상의 소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철저한 방역체계와 시행으로 더 이상의 대재앙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주시장〉

無等鼓

예전(禮錢)



동한(東漢)의 영제(靈帝) 유굉(劉宏·156년~189년)은 상인 기질이 다분한 황제였다.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운 좋게 황제가 된 유굉은 절대지존인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돈을 버는데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처음엔,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면 국고에 넣기 전에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챙겨 자신의 궁으로 보냈다. 목돈을 마련한 유굉은 이번엔 성 밖의 저잣거리를 모방한 상점과 노점을 후궁에 차려놓고 궁녀와 비빈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팔아 돈을 벌어들였다.

재미가 생긴 유굉은 이번엔 황제의 전매특허인 '관직'을 팔기로 했다. 유굉은 궁내에 '관리 교역소'를 차려놓고 공개적으로 벼슬을 팔았으며, 모든 관직에 값을 매긴 '가격표'도 만들었다. 누구든 연봉 600석의 관직은 600만 전에, 2000석의 관직은 2000만 전에 살 수 있었다.

국가에서 필요에 따라 선발한 인재라도 관직가격의 3분의 1 정도를 내야 했다. 관직을 구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입찰을 붙였으며, 인사 이동·승진 시에도 관직가격의 4분의 1 정도를 내도록 했다. 관직을 주고 거둔 돈은 축의금이라는 뜻에서 예전(禮錢)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자 관직을 사들인 사람들은 '본전'을 회수하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미친 듯이 돈을 긁어 모았으며, 그런 재주가 없는 일부 관리들은 고액의 '관직료'를 내지 못해 관직을 버린 채 도망갔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인사의 대가로 수백만~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가 사법처리 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구례의 서모 군수가 승진한 직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한 식구처럼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시정·군정을 협의해야 할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를 대가로 거액을 챙긴 그들의 후안무치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홍행기 정경부 차장 redplane@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산모 우울증 예방 보건당국 적극 홍보 나서야

최근 산모의 15%가 치료가 필요할 만큼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한다. 산모 우울증은 임신기간 중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라고 한다. 이 시기를 견뎌내지 못하면 더욱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결국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불면증, 식욕부진, 심한 피로감 등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심지어는 자살을 결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또한 심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부모의 우울증이 지속 될 경우 성격 형성 등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후 우울증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예방의 최선책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의 배려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산후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대해 적극 홍보해 주길 바란다.

▲노정원·광주시 북구 누문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